KIEP 지역경제 포커스
REGIONAL ECONOMIC FOCUS
2014년 5월 16일 | Vol. 8 No. 23
ISSN 1976-0507

칠레 신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이시은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연구원(suyi@kiep.go.kr, Tel: 3460-126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www.kiep.go.kr

차 례

1. 바첼렛 정부의 신경제정책 추진 배경
2.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가 수출이나 거시경제정책만으로는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대적인 생산성 향상과 균등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임을 선언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제약이 됨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늘릴 것임을 천명함.

▶ 1차 산품이 풍부하고 개방도가 높은 칠레는 광물과 같은 원자재나 농산품 수출을 통해 그동안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으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 마련의 필요성이 점증해옴.

▶ 바첼렛 대통령은 선거 당시 제시한 '모두를 위한 칠레(Chile de Todos)' 개혁안을 기반으로 △ 세제개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생산성 증진 △ 산업 육성 △ 공공투자 및 양허계약 제도 정비 △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함.

▶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생산성 증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이 혜택의 고른 분배에 방점을 두고,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던 전 정부의 정책과 상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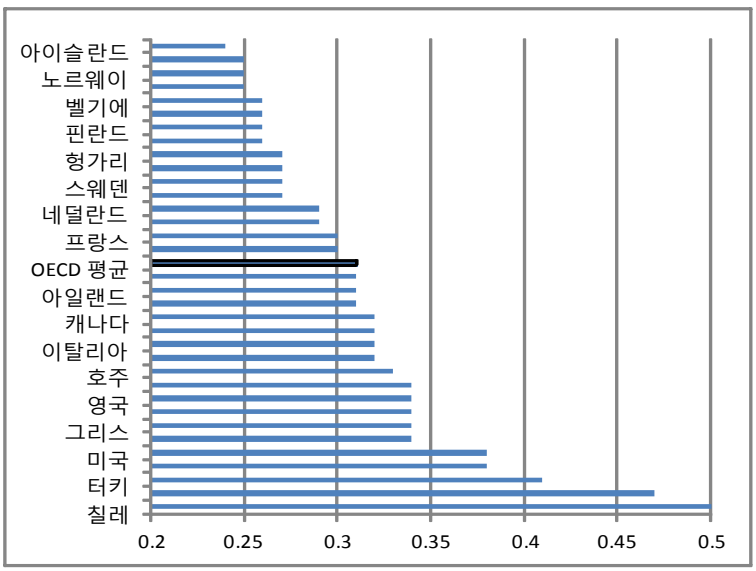
- 분배와 형평성을 강조한 세제개혁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지만, 이번 신정부의 개혁안은 다수당인 여당의 지지로 의회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나, 최근 칠레 경제의 성장 둔화전망은 바첼렛 정부의 정책 시행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1. 바첼렛 정부의 신경제정책 추진 배경

■ 지난 3월 취임한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임을 선언하고 견고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섬.

- 1990년대 5,000달러였던 칠레의 연간 1인당 소득은 현재 약 19,000달러에 달하며 빈곤율 역시 14.4%까지 감소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함.
-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3년 11월 노동자들이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며 발생한 대규모 파업과 2011~13년까지 범국가적으로 발생한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는 이러한 불만 표출의 일환임.
- 바첼렛 대통령은 이러한 불평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제약이 됨을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늘릴 것임을 시사함.
-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현 정부는 교육에 대한 지출 확대, 민영화된 연금 시스템에 대한 국가 역할 증대,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 개입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그림 1. OECD 국가의 지니계수



자료: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 1차 산품이 풍부하고 개방도가 높은 칠레는 광물과 같은 원자재나 농산품 수출을 통해 그동안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으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 마련의 필요성이 점증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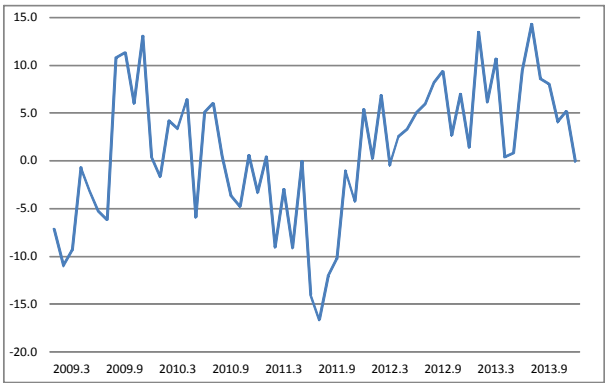
- 칠레는 현재 22개(60개국 참여)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개방도가 높은 국가로, 주로 구리, 광석, 생선, 펄프, 와인, 금을 수출하고 있는 데 반해 기계와 장비 등 비광업 부문의 제조업 기반은 약해 해당 물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 중 구리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2013년 기준 전체 767억 달러 중 402억 달러), 중국(191억 달러)과 미국(97억 달러)이 주 수출국임.

- 칠레 경제는 1차 산품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이며, 특히 최근에는 구리 가격 하락에 따른 성장 둔화가 우려됨.

그림 2. 2009~13년 전년 동월대비 구리 생산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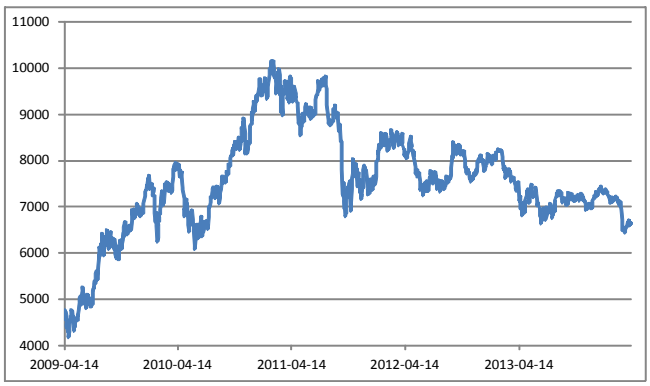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Banco Central de Chile(검색일: 2014. 4. 25).

그림 3. 2010~14년 1월 국제 구리 가격 동향

(단위: USD/ton)



자료: Korea PDS.

○ 현재 세계 구리 수입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구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1톤당 구리 가격은 6,630달러까지 낮아진 상황이며, 구리 의존도가 높은 칠레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그림 2, 3 참고).

- 경상수지적자 폭은 2013년 GDP의 3.25%를 기록하였는데 중앙은행은 2014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이보다 큰 3.6%로 전망하고 있음(표 1 참고).

표 1. 2009~13년 경상수지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명목 GDP(십억 달러)	172.3	217.6	251.0	266.4	277.0
상품 수출(백만 달러)	55,463	71,109	81,438	77,965	76,684
상품 수입(백만 달러)	−40,102	−55,372	−70,399	−75,458	−74,567
서비스 수지(백만 달러)	−2,010	−1,881	−3,054	−2,276	−2,908
경상수지(백만 달러)	3,518	3,584	−3,072	−9,081	−9,485
GDP 대비 경상수지(%)	1.74	1.38	−1.20	−3.38	−3.25

자료: 칠레 중앙은행.

■ 한편 칠레 경제는 2008~09년 세계 경제위기를 건전한 재정정책으로 빠르게 극복하고 2010~12년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견고하게 유지해왔으나, 2013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점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표 2 참고).

- 2010년 당시 높은 경제성장률은 지진 복구를 위한 공공투자 증가에 따른 효과로, 복구 작업들이 사실상 점차 마무리되어가면서 최근 건설산업 신규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2013년에 들어 광산부문 투자감소,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민간투자가 급락하였음.
- 이에 칠레 중앙은행은 최근 물가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2014년 3월 13일 기준 금리를 4%까지 인하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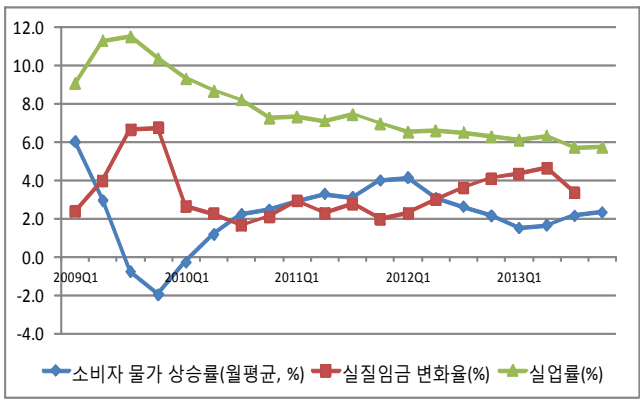
○ 칠레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2월 기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3%를 상회한 3.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식료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 주택 부문의 물가상승, 수입재 가격 상승에서 기인함.

- 한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변동 폭은 완만한데, 이는 낮은 실업률과 실질임금 상승에 기인함.

○ 2013년 하반기 기준 칠레의 실업률은 5.7%로 2009년 이래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실질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4, 표 2 참고).

그림 4. 2013년 월별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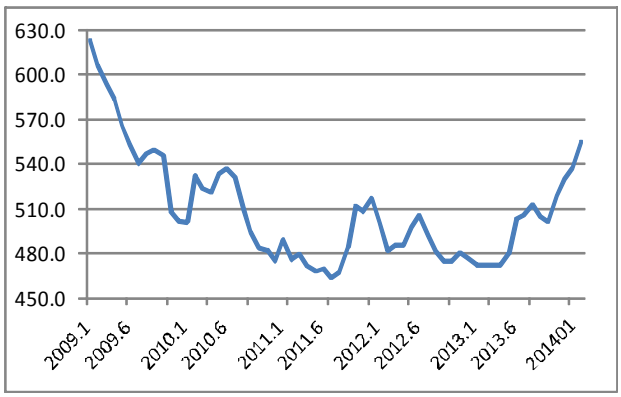
(단위: 월평균, %)



자료: 칠레 국가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 sticas).

그림 5. 2009~14년 2월 페소화 환율

(단위: CLP/USD)



자료: 칠레 중앙은행.

표 2. 2009~13년 경제성장률과 GDP 구성 요소별 증가율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실질 GDP 성장률	-1.0	5.8	5.8	5.4	4.1
민간소비	-0.8	10.8	8.9	6.0	5.6
정부 소비	9.2	4.6	2.5	3.7	4.2
총고정투자	-12.1	12.2	14.4	12.2	0.4
재화 및 서비스 수출	-4.5	2.3	5.5	1.1	4.3
재화 및 서비스 수입	-16.2	25.9	15.6	5.0	2.2

자료: 칠레 중앙은행.

2.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 바첼렛 대통령은 선거 당시 제시한 '모두를 위한 칠레(Chile de Todos)' 개혁안[1]을 기반으로 칠레 경제 내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견고한 성장을 이루어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음.

- 신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의 개입을 늘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대하는 것임.
- 이번 개혁안에는 △ 세제개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생산성 증진 △ 산업 육성 △ 공공투자 및 양허계약 제도 정비 △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가. 세제개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세제개혁) 바첼렛은 지난 4월 초 △ 세수확대 △ 소득분배 개선 △ 저축과 투자 장려 △ 탈세 근절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함.

- 세수확대를 위해 향후 4년간 법인세를 기존 20%에서 2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한 외국인 투자법 DL600을 철폐하고 국내 투자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던 '재투자 수익기금(Fondo de Utilidades Tributables: FUT)' 역시 폐지할 계획임.

○ DL600은 칠레 정부와의 일련의 계약으로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권, 고정세율 선택권, 계약사항 수정 요청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왔음.

○ 이 혜택으로 그동안 대(對)칠레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신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둠.

○ FUT는 기업의 재투자 이익에 대해 면세를 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법인의 탈세수단으로 남용되어왔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임.

- 개인소득세는 40%에서 35%로 인하할 계획인데, 법인세 인상과 함께 이 법안은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임.
- 이 밖에도 이번 개혁안에는 알코올 음료와 같은 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별 세금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바첼렛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매년 GDP의 3%에 달하는 82억 달러 규모의 재정수입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중 2.5%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나머지 0.5%는 탈세 근절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

1) 공약 내용 중에는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교육, 세제, 보건, 사회보장, 연금, 일자리, 환경, 문화, 양성평등 등 사회 전반에 관한 개선안들을 포함하고 있음.

■ (재정 건전성) 신정부는 최근 국제경제의 위기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건전한 거시경제를 유지하고,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정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이에 바첼렛 대통령은 경기 사이클과 구리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공부문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규칙을 마련하여 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정적자를 현재 GDP 대비 1% 수준에서 임기 말인 2018년까지 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움(표 3 참고).
- 제도적으로는 2006년 도입한 「재정 책임법(Responsabilidad Fiscal)」을 보강하여 재정의 균형적 사용을 도모할 계획임.

표 3. 2009~13년 칠레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현황

(단위: GDP 대비 비중,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 수입	18.3	21.0	22.1	22.1	20.9
재정 지출	22.7	21.3	20.6	21.5	21.5
재정 수지	-4.4	-0.3	1.5	0.5	-0.6
총 정부부채	5.8	8.6	11.1	12.0	12.8

자료: IMF.

나. 생산성 증진

■ (과학기술 혁신) 기존에 과학과 기술, 혁신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던 칠레의 상황에서 현 정부는 생산성 증진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우선 부족한 인적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 산업에 종사할 이공계 학생을 양성하고 인재 유치에 치중할 계획임.
- 기술혁신의 환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성을 제고시키고 광대역 인프라를 증설하며, 소외 지역에 대한 통신 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클러스터 형성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Fomento y Turismo)에 혁신과 생산성 증진 부문의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
- 제도적 차원에서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국가의 생산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경쟁력을 위한 자문기구나 기금 등을 보완하여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에너지) 정부는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새로운 진입을 촉진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을 통한 발전(發電)을 장려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집중할 계획임.

- 현재 에너지원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칠레는 전반적으로 전력 기반이 미흡한 수준인데, 이는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제조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왔음.

- 정부는 우선적으로 발전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업의 참여를 늘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 ㅇ 현재 칠레의 중부지방 송전 시스템인 '중앙연결 시스템(SIC: Sistema Interconectado Central)'에는 3개의 기업만이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력 가격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새로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 ㅇ 현 정부는 발전(發電) 시장의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기관인 '경제부하배분센터(CDEC: Centro de Despacho Económico de Carga)'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임.
- 또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송전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임과 더불어 30%까지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조명, 모터, 냉장고, 공공 건축물 등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을 도입할 계획임.

다. 산업 육성

■ (농업) 신정부는 영세농을 포함하여 취약 계층의 농업활동에 대한 금융 수단과 기술을 보조하고 관개시설을 개선하며, 시장정보 제공을 통한 농산물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움.

- 칠레 경제에서 농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전체 GDP의 약 0.3%) 인구의 4%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심각한 가뭄으로 생산성에 큰 타격을 받았음.
- 바첼렛 정부는 소작농이나 여성 및 청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영세농들의 채무상태를 개선하고, 이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 관개시설 개선 등에 치중할 계획임.
-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농산품의 질적 개선과 차별화를 위해 생산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농산품의 상업화를 위해 시장접근 비용을 낮추고 재정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출 촉진 기금(Fondo de Promoción de Exportaciones)'을 확대할 계획임.

■ (수산업) 다양한 어족자원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바첼렛 정부는 수산업에 대한 과학적 접근, 전통적 어업방식 보존, 소규모 수산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함.

- 현재 칠레에 존재하는 어장은 33곳으로 이 중 5곳은 과학 지식의 부족으로 정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칠레에 체계적인 과학적 지식을 갖춘 연구기관 부재와 함께 해결해야할 숙제로 지목됨.
- 더불어 칠레 수산청(Servicio Nacional de Pesca; Sernapesca)의 현대화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계획함.
- 한편 현재 전통 어업방식을 이용하는 칠레 국민은 약 8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소득을 유지해줄 수 있도록 생산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할 예정임.
- 전통방식으로 어업을 하는 어부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업행위 구역 설정, 그리고 이들의 연금 및 노동위생 같은 사회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임.

■ (광업) 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 광산업과 관련하여 신정부의 주요 계획안은 생산성 제고와 광물 생산의 다양화를 포함함.

- 칠레 경제에서 구리, 몰리브덴, 은, 금, 칼륨, 리튬과 같은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증하고 있으나, 광물 생산가격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비슷한 광물을 생산하는 페루나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현 정부는 기술 증진과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약 4,600여개에 달하는 광업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촉진을 통한 광업 클러스터를 강화할 계획임.
-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공공정책 이행에 대한 감시와 감찰을 강화하고, 광산업 양허제도 보완을 천명함.
- 또한 생산 다양화를 위해 최근 늘고 있는 리튬에 대한 세계수요에 맞추어 리튬 수출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임.

■ (관광) 신정부는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할 계획임.

- 칠레의 야생보호구역을 개발하고, 민간과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관광 관심지역(Zona de Interés Turístico: ZOIT)'을 설치하여 관광과 자연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계획임.
- 칠레의 관광산업에는 특히 중소기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성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민간 투자의 참여를 장려할 계획임.

라. 공공투자 및 양허계약 제도 정비

■ 바첼렛 정부는 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인프라 발전안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분절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임.

- 1990년을 기점으로 칠레의 교통 인프라 부문은 큰 도약을 하였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부족하며, 관련 제도의 분절화(fragmentación institucional)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향후 양허계약 기준 설정 시 민간부문 참여를 늘려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계획임.
- 정부는 향후 15년에 걸쳐 발파라이소 항구 인근의 해상교통을 증진시킬 계획이며, 나아가 기존 항구들을 확대·재건하고, 민간투자 참여를 통한 새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임.
- 이 밖에도 국경간 육로 개선, 레저용 인프라 증진, Chacao 운하 프로젝트 지속, 관개용 인프라 증설, 도심지역 배수시설 개선, 해상교통 증진 등을 계획하고 있음.

마. 중소기업 지원

■ 현재 칠레 인구의 55%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에 대한 참여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바첼렛 정부는 제도적인 개선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우선 정부차원에서 기업발전센터(Centros de Desarrollo Empresarial)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진단해주고, 무료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기존의 정부조달 제도를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구기능 보조,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철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임.

3. 평가 및 전망

■ 바첼렛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생산성 증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이 혜택의 고른 분배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바첼렛 대통령은 정책안을 통해 칠레 경제 내에 존재하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비춤.
- 피녜라 전 대통령은 이러한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칠레 경제의 저성장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냄.

■ 신정부의 분배를 강조한 경제정책은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왔던 전 정부의 정책과 상반됨.

- 피녜라 전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우호적인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힘입어 5%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왔음.
- 그러나 피녜라 전 대통령은 노동파업이나 교육개혁시위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방향을 견지해옴.
- 바첼렛 대통령은 심화되는 양극화와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신정부의 분배와 형평성을 강조한 세제개혁안은 현재 의회에 상정된 상황이며,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함.

- 구체적으로 바첼렛 대통령은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확대로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밝힌 바 있음.
- 신정부의 세제개혁안과 관련하여 법인세 인상이나 FUT 폐지, DL600 폐지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민간투자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전반적인 세금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여전히 주변국에 비하면 칠레의 세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자본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이번 세제개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바첼렛 대통령은 세제혜택이 감소해도 칠레에 대한 투자가 저하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개혁안의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섬.[2)]

○ 바첼렛 정부는 낮은 세금에 의한 투자유치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한 생산성 증진,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이나 제도 등이 국가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세제개혁, 교육개혁, 헌법개혁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바첼렛 대통령의 목표는 취임식을 마친 2014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100일 이내에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 현재 바첼렛 대통령이 내놓은 개혁안 중에서는 세제개혁을 포함, 군부정권부터 이어져내려온 헌법개혁안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예산 소요가 많은 교육 개혁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이번 개혁안은 구체적 프로그램 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정책 방향만 제시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혁안을 포함하여 신정부의 개혁안은 다수당인 여당의 지지로 의회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06~10년 1기 임기를 마친 이후, 2013년 62%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바첼렛 대통령은 다소 급진적이고 좌파적 성향의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또한 바첼렛이 속한 중도좌파 성향의 누에바 마요리아(Nueva Mayoría) 연합은 현재 상원의 38석 중 21석을, 하원의 120석 중 68석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바첼렛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뒷받침됨.
- 다만 연합정당인 누에바 마요리아 내에 극좌파 성향의 정당인 공산당(Partido Comunista)과 중도파인 사회 민주당(Partido Demócrata Cristiano) 간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바첼렛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임.

2) El Mostrador(2014. 5. 5), Wall Street Journal dice que Reforma Tributaria es “atentado contra el milagro chileno.”

■ 한편 생산성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나 무상교육 확대 등과 같은 신정부의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나, 최근 칠레 경제의 성장 둔화전망은 바첼렛 정부의 정책 시행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칠레 중앙은행은 2014년 3월 31일, 2014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75~4.75%에서 3.00~4.00%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였음.

○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의 주원인은 투자부문 활동, 특히 건설부문 투자의 저하로, 기존 성장 전망치인 4.1%에 훨씬 못 미치는 0.8%에 그칠 것이라 전망함.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정책에 따른 국제 유동성 감소, 중국의 경제 성장속도 둔화로 인한 1차 상품 수요 감소와 같은 외부 상황 역시 칠레의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임.

- 재정수입의 1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구리의 국제가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하락폭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요소는 신정부의 정책 실행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KIEP